2015년 주요업무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2015.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순 서

Ⅰ. 기관 현황 ····· 1

Ⅱ. 2014년 성과와 반성 ····· 7

Ⅲ. 2015년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 ····· 15

Ⅳ. 2015년 주요 업무계획 ····· 23

1. 창조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육성 ····· 25
2.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활동 지원 ····· 34
3. 산림재해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 39
4.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 ····· 44
5.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 49
6.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 55
7. 개방과 소통의 행정 구현 ····· 62

Ⅴ. 주요 정책 현안 ····· 65

<참고1>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73

<참고2> 2015년 입법 추진계획 ····· 74

<참고3>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 ····· 75

Ⅰ. 기 관 현 황

1. 조직 및 정원

2. 주요 업무

3. 소관 법률

4. 2015년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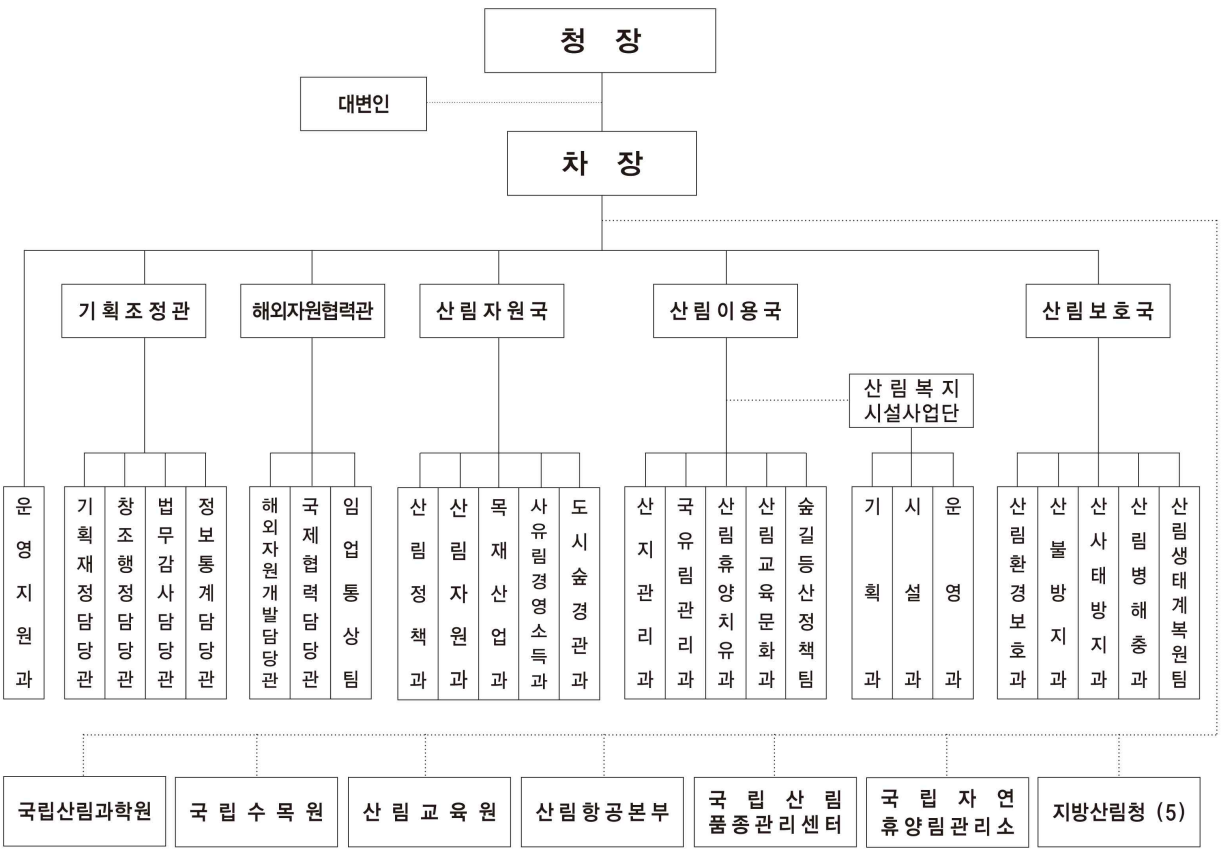
1. 조직 및 정원

❑ 임 무 : 산림자원·산업 육성, 산림보호, 산림이용·복지

❑ 조 직 : 2관 3국 1단 24과 3팀, 11개 소속기관

○ 본　　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5)



❑ 정 원 : 1,751명 (본청 276, 소속기관 1,475)

2. 주요 업무

❑ 본 청

구 분	주 요 업 무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국회, 예산 및 재정성과, 행정혁신, 조직 및 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 정보화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수출입·관세 정책, ODA, 임업분야 통상, 국제기구·협약 협상, 양자·다자협력, AFoCO 지원
산림자원국	산림정책·연구조정, 기후변화·산림탄소,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종묘·조림·숲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목재수급,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임업기계, 임업기능인 양성, 임도, 도시숲 조성·관리, 무궁화 보급, 임산물 수급, 임업인 소득 증대, 임업인 육성,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 육성
산림이용국	산지관리, 국유림 경영·관리, 산림복지·휴양 증진, 치유·산촌, 산림교육·문화, 숲길조성, 등산지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	백두대간·중앙수목원 및 산림치유단지 조성, 전시·체험·연구시설 운영
산림보호국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산림보호·단속, 백두대간 보호·관리, 산림생태계 복원,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 소속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산림보전·산림유전자원·임산공학 등 시험·연구
국립수목원	산림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증식, 광릉숲 보전
산림교육원	산림분야 공무원·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산림항공본부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구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물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종자 및 유전자원 관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 및 관리
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 및 관리, 국유림 확대 및 이용, 산불예방·진화 지원

3. 소관 법률

법 률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 사 방 사 업 법	1962. 1.15	○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2. 9	○ 산림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산 림 조 합 법	1980. 1. 4	○ 산림 소유자와 경영자의 권익단체인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997. 4.10	○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1. 3.28	○ 수목원조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 림 기 본 법	2001. 5.24	○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산 지 관 리 법	2002.12.30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03.12.31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2005. 5.31	○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7. 8. 3	○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산 림 보 호 법	2009. 6. 9	○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 민통선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역주민 지원 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1. 7.25	○ 국가·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12. 2.22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5.23	○ 목재이용 활성화·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4. 2015년도 예산

❑ 회 계 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	증△감	%
계	18,651	19,484	833	4.5
○일 반 회 계	9,023	9,791	768	8.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81	5,936	△45	△0.8
○지역발전특별회계	3,206	3,305	99	3.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41	452	11	2.5

※ 2015년 예산(총지출기준) : 정부예산 대비 0.52%, 농림예산 대비 10.1% 수준

❑ 프로그램별

(단위 : 억원)

부 문 별	2014 예산	%	2015 예산	%	증△감	%
계	18,651	100	19,484	100	833	4.5
○산림과학기술 개발	640	3.4	769	3.9	129	20.2
○해외자원 협력	237	1.3	240	1.2	3	1.3
○산림자원 육성	6,147	33.0	6,016	31.0	△131	△2.1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4,457	23.9	4,695	24.1	238	5.3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441	2.4	452	2.3	11	2.5
○산림자원 보호	5,303	28.4	5,843	30.0	540	10.2
○산림행정 지원	1,426	7.6	1,469	7.5	43	3.0

❑ 집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억원)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2015	17,242	10,309	59.8	5,100	29.6	5,209	30.2	3,532	20.5	3,401	19.7
2014	16,787	10,564	62.9	3,974	23.7	6,589	39.2	2,520	15.0	3,704	22.1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기준 금액('14년은 실적)

Ⅱ. 2014년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2. 반 성

1. 주요 성과

❑ (산림산업) 체계적인 지원·육성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목재법」('13.5시행)에 따른 산업체 **기술교육과 법적등록을** 실시하고, 목재펠릿 생산·소비지원으로 **산업화를 촉진**

- 업종별 맞춤형 교육 추진 및 생산업체 법적 등록 완료(2,769개)
- 목재펠릿 제조시설 지원 등으로 국내 생산량 증대(66→90천톤)

* 목재펠릿 90천톤 생산 → 원유수입 41천톤 수입대체 및 CO_2 123천톤 저감

○ **임업인 소득제고**를 위한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복구지원 확대로 재해에 대비한 **임업인 소득안정망을 구축**

-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자금지원 확대(250→350억원)

* 산림경영컨설팅센터 개원('14.2)으로 임업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병행

- 재난복구비 기준 상향(11개 품목, 45%) 및 지원대상 확대(7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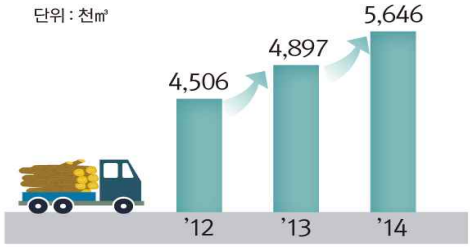
○ **FTA 등 시장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임산물을 보호**하고, **품목별 발전대책** 마련으로 **FTA의 전략적 활용 기반**을 구축

-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보호를 위한 양허제외 및 단계적 개방 합의
- 10대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대책 수립

* 밤, 떫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양삼, 산나물, 산지약용식물, 조경수, 분재 등



산림산업 GDP



국산목재 생산량

❑ (산림복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도시녹화의 민간참여 확대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

○ 늘어나는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

- 휴양시설(14개소), 치유·교육시설(16개소), 숲길네트워크(441km) 등

☞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동아일보·고려대)에서 총 40개 정책사업 중 2위로 선정

○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림교육 모델**을 제시

- 생태탐방, 에코힐링캠프, 가족캠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휴양림 우선 예약제(21개실) 추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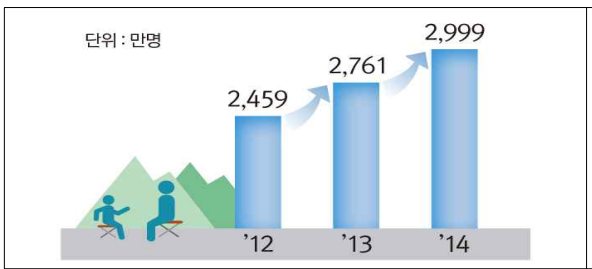
- '방과후 아카데미',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도입

○ **도시 생활권** 내에 다양한 유형의 **녹색공간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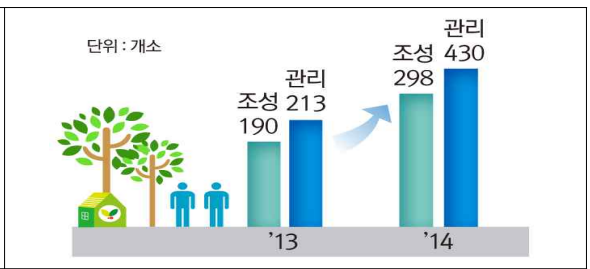
-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등 접근성 높은 도시숲(258개소)을 확대 조성
- 주거환경 개선과 산림문화보전을 위한 마을숲(2개소) 및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숲(75개교) 확대 조성

○ 국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운동(도시愛숲캠페인) 전개**로 녹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꽃 무궁화**를 확대 보급

- 시민참여로 민·관협력 모델 제시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 교육부 협업으로 학교 무궁화 보급(158개교) 등 추진



산림복지 수혜인구



국민·기업참여를 통한 녹지공간 확충

* 산림복지 수혜인구 : 자연휴양림·치유의숲·산림교육시설·수목원 이용객 수(연인원)

❑ (재해방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 **'산불골든타임제'** 강화를 통해 **산불피해 발생면적 감소**

* 산불피해면적 : (10년 평균) 776ha → ('13) 552ha → ('14) 137ha(82% 감소)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산사태 피해 : (10년 평균) 456ha, 7명 사망 → ('13) 312ha, 3명 → ('14) 70ha, 0명

○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로 **산사태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

- '14년 최초로 고속도로변 위험지(29개소) 사방사업 추진(국토부 협업)

* 도로변 산사태(건) : ('10) 6 → ('11) 3 → ('12) 16 → ('13) 9 → ('14) 0

❑ (해외협력)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리더십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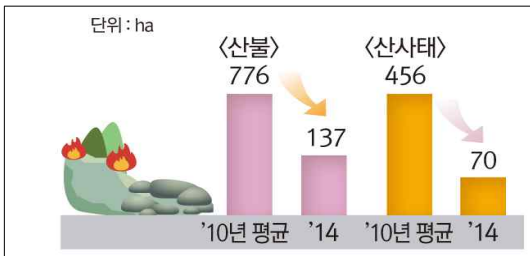
○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여 녹화성공국으로서 국제 산림복원의 리더 역할을 수행(제12차 CBD 당사국 총회시 채택)

○ **정상회담 의제**를 **중앙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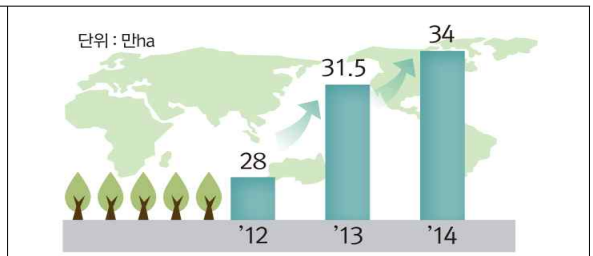
* 정상 임석하 MOU 체결 : 한-카자흐('14.6), 한-캐나다('14.9)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산림복원메커니즘**을 창립하고, **건조지 녹화파트너십**(GDP)* 을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대(3→7개국)

* 개도국의 사막화방지를 지원하는 산림청, UNEP 및 UNCCD 3자 협력 프로그램



산불·산사태 피해



해외조림면적

❑ (규제개혁) 선제적인 규제개선으로 경영활동을 지원

○ **산지 내 풍력시설 설치 규제 완화**로 발전업계의 투자를 촉진

- 산지 편입제한 완화(3만→10만㎡)로 풍력발전 사업의 규모화 유도
- 풍력시설용 기자재 운반·관리를 위한 대형 진입로 설치 허용

* 산지 내 풍력발전사업 규모 상승효과 기대치 : ('13) 79 → ('15) 200MW(2.5배)

○ **임업인·축산업인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벌기령 완화(참나무 50→25년)로 산주 소득향상 및 목재 공급 활성화
- 산지 내 가축방목 허용 확대(3만→5만㎡)로 산지축산 육성 기반 마련

*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저항력 제고 및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의 가축사료화 기대

○ **규제 개선과제** 지속·발굴 추진 및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 비용분석(5건)으로 27억원 뱅킹 및 비용검증 시 부처최초 '동의' 획득

☞ 「2014년 규제개혁 성과창출 사례 평가」(국조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청 단위 유일)

❑ (협업) 부처 간 협업으로 산림정책의 효율성을 증진

○ 산지개발 시 발생하는 **임목자원**의 **재활용** 추진(국토·환경부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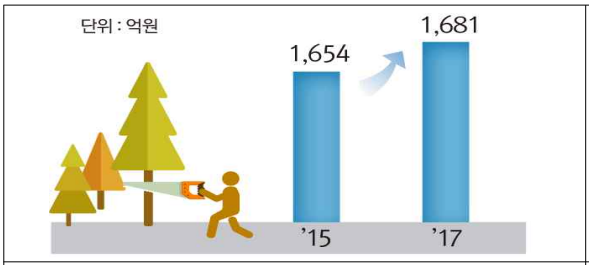
-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을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

* 전국 확대보급 시 연간 폐기물처리비 690억원 및 원목수입 1,725억원 절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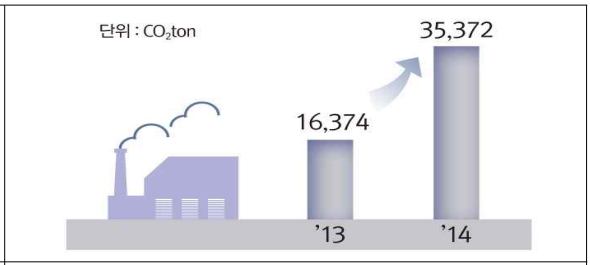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따른 임업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농식품부 협업)

- 7개 업체의 감축목표 이행 관리, 교육 및 연구회 운영 등 지원 강화

* 동화기업, 선창산업, 대성목재공업, 성창보드, 광원목재, 포레스코, 한솔홈데코



벌기령 완화에 따른 편익(추정)



임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목표 대비 감축실적

2. 반 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저하 및 신규 피해지역 발생

○ 단기간 내 피해목 **전량방제**에는 **성공**하였으나, **방제 전문 인력 부족, 현장 관리 미흡** 등으로 방제품질은 저하

○ 피해고사목의 **인위적인 이동**과 피해발생 지역에 **한정된 예찰·방제 실행**으로 인해 신규 피해지역이 확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 ('13) 59개 → ('14) 74개 시·군·구

☞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대책'**을 수립(11월)하고, 완전방제 **대책단**을 구성·운영(12월)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중

- 지역담당관·책임담당관 배치 및 방제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병행

❑ (임업인 규제) 산림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임업인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 금년도 주요 규제완화 사항이 **풍력단지 시설, 관광·산업단지 조성, 병원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임업 이외 산업분야에 해당

☞ 임업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로 **임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 노출

○ 감사원·산림청 감사를 통해 **인사운영 상 부적정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고, 국회·언론에서 지적사항이 발생

☞ 채용세습 방지 등 인사규정 개정으로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

Ⅲ. 2015년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

1. 여건 전망

2.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

1. 여건전망

❑ (산림산업) RPS[1] 제도 정착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목재·청정임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버섯, 약용식물 등 국내 **청정 임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목재수요 : ('13) 28백만 → ('14) 29백만 → ('17추정) 31백만㎥
- 임산물 생산액 : ('11) 5.7조 → ('12) 6.7조 → ('13) 6.9조원

○ **국산목재**가 주로 **저부가가치로 이용**됨에 따라 목재수요의 증가가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 국산목재 이용 : (고부가) 제재·합판 14%, (저부가) 펄프·보드 등 86%

  * 부가가치(원목 1㎥기준) : 펄프용 8만원, 합판용 10만원, 제재용 12만원

○ 임산물 생산이 **소규모·분산 재배**로 이루어지고, 단순재배형 **1차 산업**에 머물러 **임가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임가소득('13) : 29,958천원(농가소득대비 86.8%, 어가소득대비 77.6%)

○ **FTA 등 시장개방**으로 국산 임산물의 **수출 활로가 확대**되는 한편, **국제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창조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원수요의 증가를 소득증대로 연결**하고, 국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수출임업을 활성화**할 필요

---

1)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도('12년 시행)

❑ (산지이용) 개발 가능한 토지의 한계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의 타용도 이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산지비즈니스**(산지를 활용한 1·2·3차 산업)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무분별한 훼손 방지'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

* 스위스 체르마트 : 산악관광으로 인구 6천명 소도시에 연 130만명 관광객 유치

*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 케이블카 설치로 무분별한 트레킹길 감소 → 식생 회복

○ 각종 **개발규제**로 산지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저해**되는 실정

- 경사도(25도 이상), 표고(50% 이상), 산지구분(보전산지)에 따른 제한 등

☞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산지비즈니스를 육성**할 필요

❑ (산림재해) 기후적·인위적 요인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증가

○ **봄철 따뜻한 날씨**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로 인한 **방제 인력 분산** 등으로 **산불 대응여건이 불리**

- 1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철 고온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

* '14년 산불 피해(137ha)의 대부분이 봄철에 발생(129ha, 94%)

○ **지구온난화**와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로 **대형 산사태**와 각종 **산림병해충 발생·확산 가능성이 증대**

- 연평균 산사태 면적 : ('80년대) 231 → ('90년대) 349 → ('00년대) 713ha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 ('10) 26 → ('11) 49 → ('12) 48 → ('13) 218만본

☞ 3대 산림재해의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력을 향상**시켜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산림복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

○ 여가시간 확대로 산림교육·휴양·치유 등 **체험·힐링수요가 급증**

- 국민이 선호하는 야외 여가활동 1순위로 등산이 선정('12, 문체부)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구 : ('13) 2,761 → ('14) 2,999 → ('17추정) 3,530만명

○ 다양한 국민수요에 비해 **산림복지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산림교육·캠핑·힐링 등 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복잡·다양화
- 정부예산을 활용한 복지시설·인력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한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되, **민간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 및 **소득·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

❑ (북한산림) 북한 황폐지 복구와 관련한 협력사업 재개가 예상

○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우선사업**으로 부각

* 남한 : 복합농촌단지(드레스덴 선언), 산림공동관리(8.15 경축사), 종자교류(통준위)

* 북한 : 산림황폐화의 심각성과 그간의 산림 조성·관리부실 인정

☞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준비태세** 확보가 필요

❑ (해외협력) 녹화 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

○ **개도국**으로부터 **산림복구 경험·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부각

☞ 국제사회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산림분야 ODA** 규모를 늘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

*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1조 1,074억원) 중 산림분야는 0.1%에 불과

2.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

비 전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목 표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경제혁신		국민안전·행복		통일과 국제협력
창조경제로 산림산업 육성	규제개혁으로 산업활동 지원	재해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복지 증진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1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1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1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1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1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2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	2 규제 개선으로 농림축산업인의 경영 효율성 제고	2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2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	2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3 정원·자생식물·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 산업 발굴·육성	3 산지규제 개혁을 통한 유망산업 투자 촉진	3 과학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3 노년·회년기·소외계층의 산림치유·수목장 확산	3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4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임업 육성	4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4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4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4 기후변화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

정책추진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기반 확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개방과 소통의 행정 구현
1 산림자원 육성·관리체계 선진화 2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체계 구현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4 산업활동과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R&D 활성화	1 정부 3.0 2 비정상의 정상화 3 공공기관 개혁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금년도 업무 추진과제〉

국정과제	세부과제	금년도 전략목표	금년도 추진과제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12]	산림부국 실현 [12-4]	창조경제로 산림산업 육성	•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 • 정원·자생식물·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 산업 발굴·육성 •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임업 육성
		산림복지 서비스로 국민행복 증진	•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 • 노년·회년기·소외계층의 산림치유·수목장 확산 •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 산림자원 육성·관리체계 선진화 •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체계 구현 • 산업활동과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R&D 활성화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111]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111-1]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107]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107-1]	규제개혁으로 산업활동 지원	•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농림축산업인의 경영 효율성 제고 • 산지규제 개혁을 통한 유망산업 투자 촉진 •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총체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 [86]	홍수, 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83-6]	재해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 과학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92]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이행[92-1]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 기후변화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92-3]		•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126]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126-3]		•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남북간 소통의 통로를 통한 생활공동체 형성[126-5]		

Ⅳ. 2015년 주요 업무계획

1. 창조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육성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창조경제의 내실화를 통한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 정책과제

①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합판·방부목·집성재 등 국내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 촉진
-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연 500만톤)의 활용기반 마련
- 생산·유통 체계 개선 및 교육·관광을 결합한 6차산업화 유도

②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

-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유망 산림자원의 발굴·관리
- 첨단산업 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개발 추진
- 산업계 기술이전과 창업지원을 통한 주요 기술의 산업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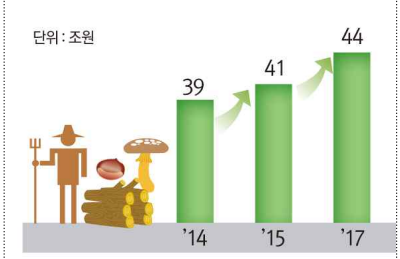
③ 정원·자생식물·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산업 발굴·지원

- 정원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원식물 소재개발 추진
- 희귀·특산 식물과 야생화자원의 수집·보급 등 이용기반 마련
- 산림휴양·치유 등 정부주도형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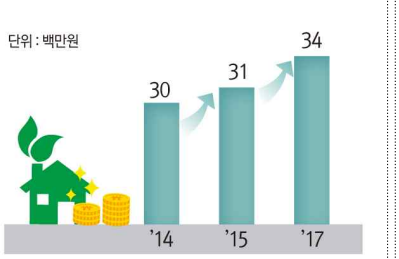
④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임업 육성

- 청정 임산물의 생산기반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수출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 기대효과



산림산업 GDP



임가소득



임산물 수출액

1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고도화) 목재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이용 고도화 추진

○ 국내 목재산업계의 **노후설비 현대화**를 최초로 지원하고, **가공기술 확대·보급**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활성화**

- 제재·건조·방부장비 등 목재제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30개소)
- 국산소나무를 합판 원료로 공급하여 고도이용시장 창출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목조건축으로 방부·집성 등 핵심기술 확산

*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집성기술을 통해 목재자원의 가치를 10배 이상 제고

○ **품질인증 활성화**와 생활권 **목재문화 확산**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이용 촉진**을 유도

- 집성재 품질인증(K-Wood) 제품 확대 : (’14) 0개 → (’15) 5개

* 인증제품의 조달우수제품 등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 권역별 목재문화체험장(7개소) 운영 및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 **목재부품산업**과 **전방산업**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부품산업(생산·가공) 및 전방산업(건축·가구 등) 간 협의체 구성·운영

원목의 가공 유형별 부가가치 상승 비교(목재 1㎥ 기준)


원목(9만원)


제재목(18만원)


방부목(36만원)


집성재(71만원)

❑ (부산물 자원화) 산지 내 버려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규제 완화**와 **임목생산 시스템 개선**으로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연간 500만톤)의 **활용 기반을 마련**

- 산림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 재활용 유도(환경부 협조)
- 원목과 부산물을 동시에 수집하는 '전목(全木) 수집시스템' 확대

* 국유림 목재생산 구역 내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 **산림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산림부산물 이용을 증대**

- RPS제도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목재펠릿 생산 : ('14) 90천톤 → ('15) 95천톤(원유 43천톤 대체, CO_2 130천톤 저감)

❑ (6차산업화) 생산·가공과 서비스의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

○ 임산물 **생산·가공단지를 집단·규모화**하고 **유통체계를 효율화**

- 생산단지(38개소) 및 복합경영단지(22개소) 조성으로 집단·규모화
- 생산지별 산지유통센터 조성(7개소) 및 산지·소비자 직거래 확대
-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65백명)을 6차산업화 주체로 육성

○ **산림자원 6차산업화단지 확대**(2→6개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떫은감·황칠 등 주산지에 생산·가공·연구를 복합한 클러스터 조성
- 수확·체험(U-pick farm)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탐방 프로그램 접목
- 숙박시설, 식당, 버스·철도, 여행사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

6차 산업화 성공사례(청도 감 와인)



- 경북 청도 감 재배단지와 연계하여 감 와인 가공·생산
- 폐철도 터널을 와인숙성 창고로 활용 및 관광 상품화
- 대통령 취임식, G20 정상회담 등 건배주로 이용
- 연간 30만병 생산으로 약 20억원의 매출을 기록

2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

❑ (자원확보) 첨단산업에 활용될 유망 산림자원 발굴·관리

○ 국내 주요 **식·약용** 및 **산업용 산림자원의 탐색·수집을 확대**

- 유용 산림자원의 수집·확보 및 보존 확대(103만→105만점)

  * 국내 육상 생물종의 92%가 산림에 서식하고, 지형·기후변동 커서 활용 잠재력이 풍부

- 고문헌과 향토지식을 활용한 유용물질 탐색 및 DB화 추진

○ 나고야 의정서 발효('14.10)에 따라 **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

-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가권리 획득과 무분별한 국외 반출 제한

  * 구상나무 등 고유자원이 국외로 유출되어 관상수로 활용되는 사례 발생

- 생명자원 연구의 허브인 산림약용자원 연구시설 건립 추진('15.12 준공)

❑ (기술개발) 분야별 전략기술 선정·투자로 기술경쟁력 확보

○ 첨단산업 시장분석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정**

- 국립산림과학원, 컨설팅기관 등을 활용한 기술분야별 조사 추진

○ **전략기술**의 **집중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

- (BT) 의약품, 화장품 등에 활용 가능한 기능성 천연 물질 연구

  * 산뽕나무('14, 퇴행성뇌질환에 기존치료제보다 우수한 효과 구명→동물실험 필요)

  * 산양삼(면역강화), 황칠나무(항노화·미백), 천마(심혈관 질환 개선) 등 산업화 유망

- (NT) 나노융합산업의 원료인 목재 섬유소 분리·활용기술 개발

  * 휘어지는 종이배터리('14, 나노섬유 분리막 특허등록→손목형 스마트폰 등에 활용 가능)

  * 인공뼈·혈관, 생분해성 플라스틱, 나노 복합재용 강화제 등 산업화 유망

❑ (산업화) 기술이전·창업지원을 통한 첨단산림산업 활성화

○ 산림분야의 **우수 기술** 및 **특허**의 **민간 이전**으로 산업화를 유도

- 대학·공공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특허를 기업에 소개
- '先 기술이전, 後 기술료 납부' 제도화로 기술이전 촉진(산업부 협조)

○ 기업의 초기 정착을 돕는 **창업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

- 임업진흥원과 선도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산림벤처 멘토링단' 구성·운영
-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경영 훈련, 창업비용 지원 및 유관기술의 집적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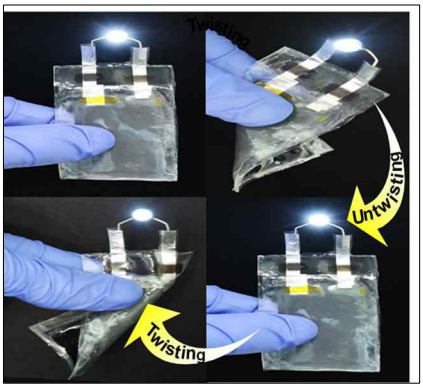
산업계 기술이전 성공사례



<헛개나무 기능성 물질 특허 기술이전>

- 동의보감·본초강목에 소개된 헛개나무 효능을 토대로 유용물질 탐색
- 헛개나무 추출물의 숙취해소 효과를 증명하여 특허 출원(국립산림과학원)
- (주)생명의나무에 기술이전(이전료 18천만원)
- (주)생명의나무는 상품화로 연평균 90억원 매출 실현

산림산업의 나노기술 적용사례



<휘어지는 종이배터리 개발>

- 나무로부터 휘어지는 종이배터리 제조 원천기술 확보(국립산림과학원)
- 나노섬유 응용 전지용 분리막 개발('14, 국제특허등록)
- 전지폭발 위험방지, 고용량 및 고출력 구현 가능
- 리튬이온전지 세계시장 22조원 규모(웨어러블 전자기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배터리 등 응용 가능)

3 정원·자생식물·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산업 발굴·육성

❑ (정원산업)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반으로 산업화 유도

○ 정원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초 인프라를 구축**

-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운영 및 산업화·연구개발 근거 마련

  * 「수목원법」 개정안 시행('15.7 예정) 대비 하위법령 마련

- 정원문화 진흥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

  * 정원소재의 생산·유통, 기술·자재개발,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전담

○ **정원문화 확산** 등 정원산업의 **6차산업화** 기반을 조성

- 정원 페스티벌, 가든쇼 등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14년 순천만정원 345만명, 코리아 가든쇼 45만명 관람 등 성과거양

  * 영국 첼시플라워쇼 매년 1.3억불 수익, 일본 정원동호인 37백만명 등 벤치마킹

- 수목원·식물원(46개소)을 기반으로 정원식물 소재개발 및 상품화 방안 마련

  * 희귀·특산식물 증식·이용, 정원소재용품 개발, 정보교류 및 유통기반 구축 등

❑ (자생식물산업) 희귀·특산식물, 야생화 자원의 산업화 추진

○ 잠재가치가 큰 **자생식물**의 **수집·증식·보급으로 이용기반을 마련**

- 수집·1차 증식 후 화훼생산자 분양을 통한 유통·판매 지원

  *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및 화훼생산단체 협력체계 구축

○ 새로운 디자인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자생식물 세밀화를 확대 제작**(445점 → 520점)하고, 희망기업 등에 **보급**하여 **상품화**를 추진

  * BH 사랑채 세밀화 전시 : '14.5월 개장 후 중국 관광객 호평 등으로 1년 연장

❑ (건강산업) 정부주도형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산업화 추진

○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구축**

-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 등록제 신규 도입 및 프로그램 유료화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 추진(국립산림과학원)

  * 전문업 등록제 운영, 산림치유마을 육성, '산촌유학' 활성화 방안 등

○ 건강산업의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 정부 직접고용에서 탈피한 민간위탁형 시범사업(협동조합 등) 실시
- 산림교육서비스 유료화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공모사업 추진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 국립뿐만 아니라 공·사유 휴양림까지 산지전용신고 의제 확대

  * 국·공립 시설 신규조성 지양 및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사유 휴양림 활성화 병행

- 지자체장도 조성·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지원(개소당 연간 1억원)
- 개재된 非산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1ha 이내) 등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례



- '13. 4. 20 ~ 10. 20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
- 세계 각국의 선진 정원문화를 국내에 소개
- 방문자 수 : '13년 440만명 / '14년 345만명
- 지역경제 파급효과('13)
  - 생산유발 1조3천억원, 부가가치 6,790억원
  - 일자리 11천명 창출

4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임업 육성

❑ (생산기반) 임산물 산업화 및 소득창출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 **수실류, 관상식물류** 등 생산기반 지원으로 **임가소득을 증대**

- 밤, 감, 대추, 호두 등 주요 수실류 생산 장비 및 시설 지원
- 지력이 약화된 재배지에 친환경 관리비(유기질비료 등) 지원

○ **미래성장 품목**인 산양삼 등 **산림약용자원 산업을 육성**

-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품질검사 비용 지원 등 재배자 부담 경감
- 산양삼 위상 정립을 위한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 조성(53억원)

○ **산림버섯**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과 연구개발**을 추진

- 표고버섯 원목·톱밥배지 생산시설 및 우량종균 공급 지원(11억원)
- 톱밥배지 공급 확대를 위한 남부권 톱밥배지센터 조성(1개소, 30억원)
-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13~'21)' 수행

❑ (소비확대) 지역 특산 임산물의 명품화로 상품가치를 제고

○ **지리적표시 확대**로 국내 청정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

- 지리적표시 등록 : ('14년까지) 51 → ('15) 52 → ('17) 60품목

○ 지리적표시 품목의 명성·특성을 고려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임산물 소비를 촉진

❑ (소득안정) 재해보험 확대 및 산지은행 도입 등 소득안정성 강화

○ **임목보험** 도입('16년)을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시스템**을 구축

○ 임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추진

❑ (수출기반) FTA시대에 맞는 품목별 수출 전략상품 개발·육성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상품개발 R&D**를 추진('14~'16)

- 주요 임산물에 대하여 對 중국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략상품 개발
- 중·장기적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장법 및 유통방안 마련·보급

○ **임산물 가공지원** 및 **수출특화단지 확대**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시설개선 지원('15년 최초 2개소)으로 수출형 명품브랜드 생산 유도
- 임산물 수출특화 단지 육성 및 공동 수출장비·선별시설 지원

* '13년 충남 부여(표고) → '14년 충남 청양(표고/밤) → '15년 경북 청도(감)

❑ (해외시장개척) 임산물 수출국 다변화와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진출 희망업체에 대한 **시험수출기회 제공**(마켓테스트) 및 **시장조사·박람회 참가** 등으로 **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

- 해외시장 개척사업 : ('14) 1,028백만원 → ('15) 1,386백만원

○ **해외 판촉전** 및 **주요 바이어 초청·홍보 지원**으로 국산 청정 임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규 거래선을 확보**

❑ (수출조직) 체계화된 수출활동을 위한 수출전문조직 육성

○ **수출협의회**(5개)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활성화**

* 품목별 수출협의회(5개) : 밤, 감, 표고버섯, 목재제품, 합판·보드

○ 수출 전문업체를 **수출선도조직**으로 **육성**('15년 2개소 선정)하여 **임가의 지속공급체계**를 확립하고, **품질관리**로 경쟁력을 강화

2.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활동 지원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규제개혁을 통한 농림축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산악관광 등 유망산업 활성화

◇ 정책과제

①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 고밀도개발과 절대보전의 이분법적 산지이용 기준 개선
- 산지 원형과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공법의 개발·보급

②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농림축산업인의 경영 효율성 제고

- 임업경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임업인 소통 강화
- 수원함양보호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 유도
- 산지 내 가축방목과 조사료 파종 등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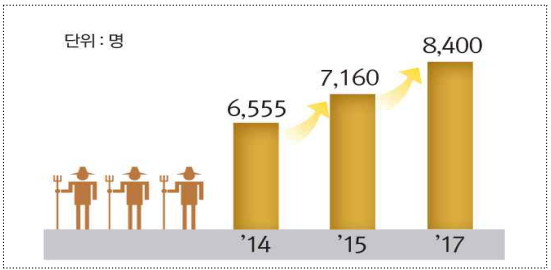
③ 산지규제 개혁을 통한 유망산업 투자 촉진

- 토석채취지 내 외부토석 반입 허용 등 석재산업 육성 제도 정비
-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평균 경사도 제한 완화로 투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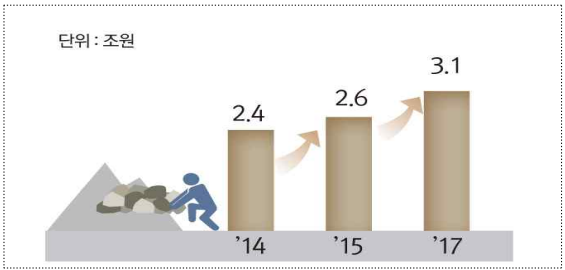
④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산악관광 특구법」 제정을 통한 산악관광 제도화 추진
- 평창(대관령) 동계올림픽 특구를 활용한 산악관광 모델 창출
- 산림복지시설·트레일 등과 연계한 산악관광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전문임업인 수



산지 내 석재생산 허가량(금액)

1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 (생태적 산지이용)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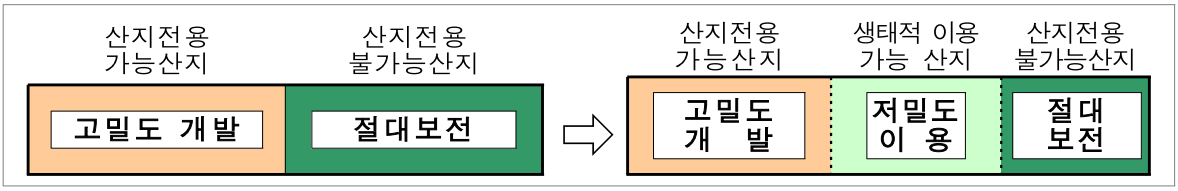
○ 고밀도 개발과 절대보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을 추진

- 평지화된 개발보다 **원형을 최대한 존치**하고, 경관을 고려한 저층건물·목조주택 등 **친환경 소재 및 공법 활용**

○ 획일적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 벗어나 산림재해 안정성 등 **지형조건에 따른 산지전용 기준**을 마련

* 적용범위 : (현행) 「민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에 따른 일부 산지 → (개선) 산림복지단지, 산악관광특구 내 시설 및 산지 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

<생태적 산지이용의 개념>



○ 자연친화적인 복구를 위해 **산림기술자의 설계·감리 참여**를 제도화하고, 복구설계서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

❑ (계획적 산지이용) 산지관리 계획에 따른 산지이용 추진

○ 산지관리 기본·지역계획에 반영된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에 따른 **계획적 전용허가**를 실시

* 산지경관 관리체계 개발('13~'15), 산줄기연결망 체계구축('13~'16) 연구추진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추진

* ('15년) 산지구분타당성 시범사업 → ('16~'17년) 산지구분타당성 조사(17개 시·도) → ('18년) 산지구분도 작성·고시 및 산지정보시스템 반영

2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농림축산업인의 경영 효율성 제고

❑ (임업인)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 추진

○ **청정 임산물 재배**에 적용되는 **산지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 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시간적 부담 완화(임업인·단체 주요 민원사항)
- 재배면적 제한(5만㎡ 미만) 폐지로 임업경영의 규모화 유도

○ 임업인 간담회, 국민공모제, 규제개혁신문고, 소통·체감 100℃ 등 **임업인**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채널을 다각화**

○ **기 규제개선 사항**의 조기 현장 정착과 임업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현장 홍보·점검**을 실시

❑ (농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 대표적 보호지역인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의 61%) 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을 허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법」 개정 추진(농식품부 협조)

❑ (축산업인)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속 추진

○ **농림어업인·법인**의 **요존(要存)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허용**

○ 임간(林間) 방목지 내 **조사료 파종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신고로 완화**하여 **축산업인**의 **부담을 완화**

* 현재는 조사료 파종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초지조성허가)가 의무화

3 산지규제 개혁을 통한 유망산업 투자 촉진

❑ (석재산업) 산지 내 토석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석재 가공장비의 가동률을 제고(석재산업계 주요 건의사항)

○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석재 채취·가공단지 조성, 인력양성, 창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규정

* ('13년) 토석채취허가 184건 578만㎡, (연간 생산액) 1조원으로 임산물 중 최대

❑ (개발제한)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규제개선

○ 산지 개발을 저해하는 **연접개발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

- 선(先) 개발자 선점 시 주변지역 추가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 해소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기존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3만㎡ 이상일 경우 전용 제한(국토계획법상 동일규제는 '11년 폐지)

○ 산지 내 개발사업 허가에 필요한 **도로 관련 규제를 완화**

- 「도로법」 및 「사도법」 상 법정도로 이외에 현황도로까지 추가 허용

❑ (기타규제) 경사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부담금 감면 추진

○ 구역 등의 협의 시 **산지**의 **평균경사도**에 대해 검토를 받은 경우, 실시계획 협의(허가)시에는 **추가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구역 협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불허되는 문제점 해소

○ 공용·공공용시설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을 확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용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4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제도정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산악관광 제도화 추진

○ **「산악관광 특구법」 제정**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문체부 주관, 산림청 등 협조)

- 기존의 경사도·표고 제한은 완화하되, 재해에 안전한 산악관광 시설 입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 평창(대관령) 올림픽 특구 내 수목원 조성 등과 연계한 신규 산악관광모델 창출

○ **산림 내 캠핑·레포츠 관련 규제개선**으로 관광자원을 확충

- 산림 내 캠핑 수요 충족을 위한 숲속야영장 및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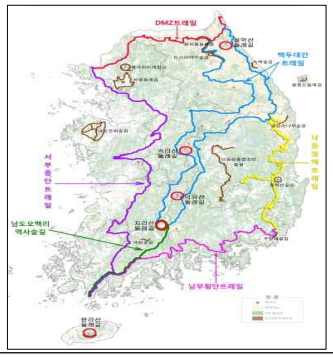
❑ (시설연계) 산림복지시설·트레일 등을 산악관광과 연계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프로그램**을 **산악관광 자원으로 활용**

- 출생~청년기 : 숲태교, 교육·레포츠 등과 연계한 **체험형 산악관광**
- 장년~노년기 : 산림휴양·치유 등과 연계한 **탐방형 산악관광**

○ **5대 트레일·명산 둘레길**과 연계한 **산악관광 네트워크화**를 추진

국가트레킹길 구축 계획



- 새로운 걷기문화 창출을 위한 전국을 잇는 트레킹길 네트워크 추진(7,614㎞)
- 한반도 숲길의 핵심축인 5대 트레일과 5대 대표 명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국가 트레킹길 조성

* 5대 트레일 : 백두대간·DMZ·낙동정맥·서부종단·남부횡단

* 5대 둘레길 : 설악·속리·덕유·지리·한라산

○ **6차 산업화 단지**(임산물 생산·유통 및 체험단지)와 **연계**로 지역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 소득제고에 기여**

3. 재해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과학적 산림재해 방지 체계(SPS, Smart Protection System)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정책과제

① 산불예방 및 대응 체계 고도화

- 산불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정
-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제' 및 '기계화진화대' 운영

②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ICT 기반의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도 증진
- 생활권 사방사업 확대 및 부처 간 공동 예방·대응 체계 강화

③ 과학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 재선충병 피해지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예찰 시범사업 추진
-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페로몬트랩 등 방제 기술 다양화
- 참나무시들음병 부처 간 공동방제 및 나무의사 제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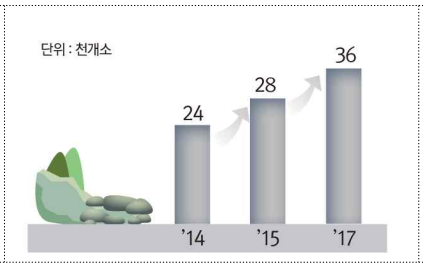
④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휴양시설의 4단계 안점점검 및 노후시설의 선제적 정비 추진
- 재난대비 시설 보완 및 휴양림 직원·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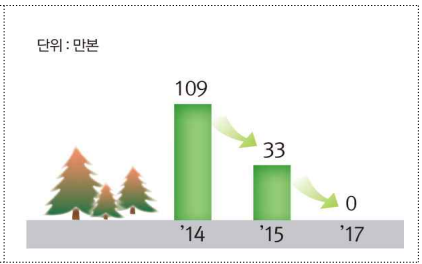
◇ 기대효과



산불발생 건수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누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본수

1 산불예방·대응체계 고도화

❑ (예방·감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황관리 및 예방대책을 시행

- 지역·시간대별 분석결과에 따른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실시

  * 지역별 : (남부권) 1~4월, (중부권) 2~4월, (북부권) 3~4월

- 불법소각 단속 강화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정(100개 → 200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효율적인 **입산 관리**와 **산불방지시설**의 **적지적소 설치**를 추진

- 네이버·다음지도 등 등산로 개방구간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관리 가능한 등산로는 최대한 개방하고, 통제구간(7천km)은 단속을 강화

- 산불예방·사후감식이 가능한 밀착형 감시카메라(19개소) 및 주요 대상물 보호를 위한 산불소화시설(18개소) 확충

❑ (진화)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 **'골든타임'**(30분내 현장 도착) 강화를 위해 **헬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전국 격납고(11개)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 수시 이동 배치

- 대형산불 확산 시 유관기관 헬기(소방 25, 군 21) 조기 지원 및 임차헬기(49대)의 인접 지자체간 진화 지원 활성화

○ 지자체·관리소별 **초동진화 전담 '기계화진화대'**(193대)를 **운영**

- 야간산불 발생 및 산불 확산 시 '광역특수진화대'(6대) 지원

- 진화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지역단위 진화경연대회 실시

2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 (예방·대응)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거주자 실태 DB 구축 등 집중관리

  * 실태조사 : ('14까지) 24,000 → ('15까지) 27,500 → ('17까지) 36,000개소

-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 **현장예방단 확충**으로 취약지역 점검 등 **예방 조치를 강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 ('14) 50개단, 200명 → ('15) 88개단, 352명

○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도 증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

- ICT 기반의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한 산림지반특성지도 시범 제작

❑ (사방사업) 산사태 재해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재해예방 효과성 제고

○ 주택·도로변 등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사업을 우선 추진

- 사방댐/계류보전 : ('14) 916개소/589km → ('15) 895개소/584km

○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

- 도로변 산사태우려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 추진

  *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여 고속도로변(64개소), 국도변(9개소) 산사태 재해예방

- 민북지역 군사시설 주변 산사태 재해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 추진

○ **전문가 현장지원 확대**로 사방사업의 안전성·환경성을 강화

- 산사태 원인조사, 설계·시공 기술자문 등을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사방구조물의 안전성 및 경관·환경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사방사업 확대

3 과학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 (재선충병 방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방제현장 품질관리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기반 구축

○ 항공예찰(무인항공기 활용) 등으로 **피해지역을 조기에 발견**

○ **매개충 우화기 이전 피해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고, 방제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방제품질을 제고**

- 사업장별 **중복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실사업 원천 차단

* 감시체계 : 상시감독관 / 현장특임관 / 지역담당관 / 책임담당관 / 외부 모니터링

○ **방제기술을 혁신**하고, **피해고사목의 재활용을 촉진**

- 페로몬 트랩 실용화(1천ha), 천적 개발, 불임 매개충 방사 연구 강화
- 고사목 처리방식을 개선(훈증→파쇄 후 펠릿 제조)하고, 대량 훈증 시설을 설치(3개소)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재목으로 활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책임을 강화**

- 책임방제 개념, 방제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신설

❑ (일반병해충 방제) 생활권 주변, 등산로 등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 방제로 피해 확산 저지

○ 부처 간 공동방제로 수도권지역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을 저지**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솔잎혹파리 방제**로 **산림경관을 보호**

○ 지속적인 임업적 방제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를 유지

-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종합방제 사업 지속 추진

○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 강화 및 **나무의사 제도 신설** 등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를 구축

4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예방강화) 산림휴양시설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 **안전점검 관리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점검**을 실시

- 표준화된 점검표에 따라 4단계(매일, 월별, 반기, 특별점검) 점검

○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의무화**하여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

- 연 2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미흡·개선점은 즉시 보완

○ **수질검사 강화**로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

- 음용수는 연 4회, 물놀이장 등 생활용수는 연 2회 검사 실시

○ 시설물 정밀진단, 보완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노후시설을 정비**

- (국립) 목조건축물(37개소) 정밀진단·보완, (공·사유) 산사태, 산불 등 복합재해 모니터링 실시(18개소)

❑ (신규제도) 안전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숲속야영장·치유의 숲 등의 **시설·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

○ 안전관련 시설기준 마련에 따른 각종 **안전 보완사항을 추진**

- 재난경보(방송)시설, 숙박시설 내 소화·피난 설비, 비상대피시설 등
- 지자체, 사유시설별 현황 파악,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에 따라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

- 권역별 교육 실시(상반기), 휴양림 별 자체 직원·이용자 교육 등

4.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복지 증진

◇ 정책과제

①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 유아숲체험원 등 유아 전문 산림교육 공간 및 전문가 양성 확대
- 산림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산림교육 다양화를 위한 부처협업 증진

②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

- 자연휴양림 등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계층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숲길DB 구축·개방 및 권역별 레포츠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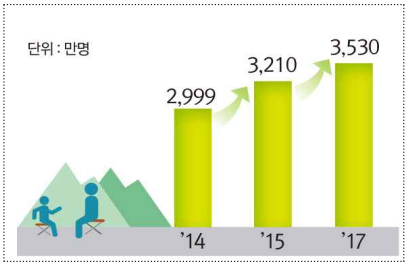
③ 노년·회년기 산림치유·수목장 확산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소외계층·스트레스 직군을 위한 특화된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선도를 위한 수목장 확대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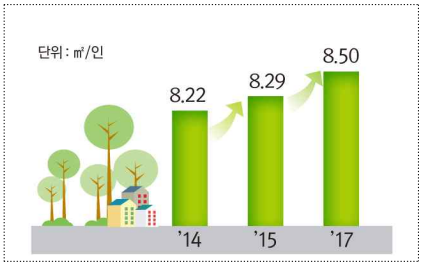
④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 도시숲, 가로수 등 생활권 녹색공간 및 우리꽃 무궁화 확대 보급
-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의 확대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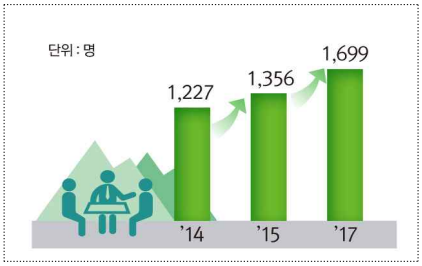
◇ 기대효과



산림복지 수혜인구



생활권 도시숲 면적



산림복지 전문 일자리

1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 (유아숲교육) 유아 전문 산림교육 공간과 전문가 양성 확대

○ 유아의 창의성과 오감발달을 위한 체험·놀이·교육 공간으로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을 대폭 확대**

- 유아숲체험원 조성 수 : ('14까지) 23개소 → ('15까지) 58개소
- 유아숲교육 수혜 인원 : ('14) 63만명 → ('15) 80만명

○ 숲과 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융합시킨 **유아숲지도사**를 확대

- 유아숲지도사 양성 : ('14까지) 350명 → ('15까지) 710명

❑ (산림교육) 산림교육 역량 강화 및 협업사업 확대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확대**하고, 숲해설가의 **전문성을 제고**

- 프로그램 인증 : ('14까지) 18개 프로그램 → ('15까지) 50개
- 숲해설 경진대회, 숲해설가 보수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 산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

- 교육부(자유학기제), 여성가족부(방과후 아카데미), 법무부(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등

산림교육 추진 사례


유아숲체험원(천보산)


유아숲교육


산림교육(학교폭력 학생 대상)

2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

❑ (산림휴양)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휴양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

- 휴양림(6), 산림욕장(4), 숲속야영장(1), 바이오휴양밸리(3개소) 등
- 요우커 등을 위한 맞춤형 시설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평창올림픽 연계)

○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

- 숲속야영장, 레포츠 시설의 정의, 타당성 평가·인증제·체험료 도입
- '제대로, 그대로' 올바른 휴양문화 캠페인을 전개

* '제대로, 그대로' : 산림은 있는 그대로, 휴양은 제대로 즐기자는 대국민 캠페인

○ **소외계층을 배려**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보완 등

* 바우처 : 저소득층 가족에게 산림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권(약 15만원) 제공

❑ (숲길·레포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레포츠 기반 강화

○ 전국 **숲길 DB 구축·개방**으로 이용객을 위한 **열린 플랫폼**을 **마련**

- 구간별 숲길 정보 활용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산업화 유도

*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사업'으로 '17년까지 전국 숲길 DB구축·개방 완료

- 향후, 숲길 통합정보(지도·교통·숙박 등) 모바일화('코리아모빌리티') 추진

* 주변지 방문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숲해설가·등산가이드 등) 창출효과 기대

*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모빌리티' 가동('08) 이후 트레킹 인구 매년 15% 증가

○ 산림레포츠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등산학교 설치**를 추진

-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승마·마라톤·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등
- 국가 차원의 건전한 산행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3 노년·회년기 산림치유·수목장 확산

❑ (산림치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 산림치유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 치유의 숲 : ('14까지) 8개소 → ('15까지) 13개소

  *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10~'15, 1,413억원 / 영주·예천)

-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300명) 및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

○ 건강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건강인/준환자, 장애인/비장애인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12만명)

○ **소외계층·스트레스 직군**에 특화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

- 관련 부처와 민간 협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프로그램 품질 향상

  * 소외계층(다문화가정·탈북주민·요보호 아동), 스트레스직군(AI방역·소방·경찰 등)

❑ (수목장) 수목장림 확대 등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선도

○ **국·공립** 수목장림을 **확대**하고, **사립**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

- 국립 수목장림 신규 조성(중부권), 공립 수목장림 신규 조성(보령시)

○ 각종 **규제완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로 **수목장을 활성화**

-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의제처리 규정 마련

- 지도층 참여유도, 임업 유공자 묘역 마련 등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산림치유·수목장 추진 사례



치유의 숲(경기 양평)



도시민을 위한 산림치유



국립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

4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 (인프라) 도시 생활권내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

○ 도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생활권 녹색공간을 제공**

- 도시숲(224개소), 명상숲(106개소), 가로수(631km) 조성·확대

○ 교육부 등과 협업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를 확대 보급**

- 생활권 무궁화 동산 조성(11개소), 학교 무궁화 보급(318개교)

○ **전통 마을숲을 복원**하고, 지역특화형 **산림경관숲을 시범조성**

- 전통 마을숲 복원(8개소), 복합경관숲 조성(2개소)

❑ (도시녹화운동)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 확산

○ 도시숲 조성의 시민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

- 금호강 생활숲(대구시민의 숲) 신규 조성(10억원)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도시녹화운동 참여 확대**

- 기업·지자체·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 조성(10개소)
- 시민단체·기업이 참여한 학교숲 조성(8개교)

* 대표사례 : 울산대공원(SK), 대전 유림공원(계룡건설), 학교숲(삼성화재) 등

○ 도시녹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숲트러스트를 구성·운영**

도시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사례


도시숲(서울)


학교숲(인천)


가로수(아산)

5.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그린데탕트 구현 및 글로벌 시대의 산림협력 주도

◇ 정책과제

①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 종자교류, 산림병해충 방제 등 민간단체의 소규모 협력사업 지원
- 국제기구 협력사업 개발 및 남북 산림과학자 간 공동연구 추진
- '복합농촌단지·그린데탕트 협의회' 및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운영 활성화
- 북한 산림황폐화 모니터링 및 대북 종자 지원용 양묘장 추가 조성

②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 해외투자 컨설팅 강화 및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시범사업 모델 개발 추진
- 기업·국제기구 해외인턴 확대 및 양자협력 국가별 특성화 의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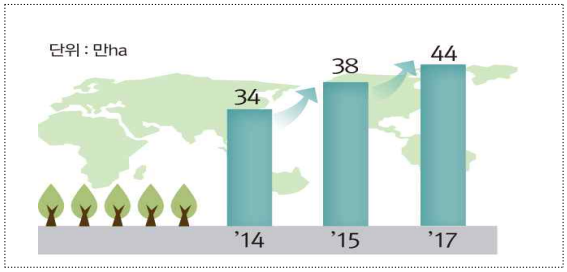
③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정상간 합의 의제 이행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 설립
- 한국형 산림복지숲(녹색한류 新모델) 개발 및 사막화 방지 등 ODA 강화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및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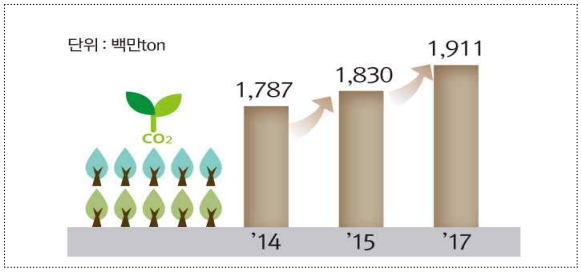
④ 기후변화 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

- 제1차 탄소흡수원 종합계획 이행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 한국형 REDD+ 모델 정립 및 GCF, GGGI와 연계한 산림사업 추진

◇ 기대효과



해외조림면적



산림의 CO_2 저장량

1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 (협력사업) 조기 실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도출

○ 신뢰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소규모 사업**을 우선 추진

- 초기에는 종자교류,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임농복합경영 등 시범조림과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

○ 안정적 사업을 위한 FAO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개발·추진

- 북한 산림 공무원 등 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
- 기존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산림조사사업 등 신규사업을 개발

* 산림청-FAO 협력사업 : 아시아(북한) 기후변화 능력배양 사업('09~'16)

○ 남북한 과학자간 **학술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동연구**를 추진

* 한반도 수목도감 발간, 통일나무(남북 수목간 교잡육종) 개발 등

❑ (추진기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유관부처, 민간단체** 등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통일부, 농식품부 등과 '복합농촌단지·그린데탕트' 협의회 운영
-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과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간단체 사업 지원 및 협력사업 발굴·구체화

○ **북한 산림 황폐화** 및 **산림재해**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북한 산림관련 **최신자료**를 수집하여 **DB 구축**

○ 대북지원용 **종자·묘목을 비축**하고, **양묘장을 추가 조성**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북용 종자 20톤, 묘목 15만본 확보

* 지원종자 : 낙엽송, 잣, 오리, 아까시, 싸리, 물푸레나무 등

* 지원묘목 : 낙엽송, 잣, 밤,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오리, 싸리나무 등

- 기후·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대북지원 양묘장 조사·설계 추진

2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 (자원개발)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반 조성

○ **해외 산림자원개발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유망국가 발굴을 위한 **정보 서비스, 컨설팅 강화** 및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모델개발** 등 해외 산림 투자업체 지원을 강화

- 해외투자설명회 개최(2회), 투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개편
-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시범사업 모델 개발 추진(인도네시아)

* ('13~'15) 시범조림 → ('16) 사업모델 보급 → ('24) 민간 투자 확대(2만ha)

❑ (해외인턴) 해외산림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 내실화

○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

- FAO, ITTO, 몽골사업단 등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 파견확대

○ 기업수요에 맞는 **인턴-기업 맞춤형 채용**으로 취업률을 제고

❑ (양자협력) 협력국가별 맞춤형 관리와 특성화 의제 개발

○ **맞춤형 양자산림협력** 활성화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

- 필리핀 양묘장 조성, 중국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에콰도르 산림복구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협력 사례



해외조림 시범사업(인도네시아)



해외인턴 발대식



한·캐나다 산림협력 MOU

3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합의이행) 정상합의 이행으로 국익제고 및 국제사회 기여

○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인도네시아), **목조건축 및 대형 산불 방지 기술교류**(캐나다), **녹색산촌 복원사업**(베트남) 등을 이행

○ 아스타나 우호의 숲 조성과 아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카자흐스탄) 추진으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에 기여

* 아랄해 : 90%가 고갈된 세계 4대 내륙호수로 환경재앙의 대표적 사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4.12) 합의에 따라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로 확대** 설립

❑ (지구녹화선도)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산림복원 및 사막화방지 지원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14.10 CBD 총회시 채택) **이행**을 위해 CBD 사무국과 **MOU를 체결**하고, **액션플랜을 수립**

○ FAO의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FLRM)'**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산림황폐지 경관복원 대상국가 선정 및 이행**

○ UNCCD 및 UNEP 등과 함께 추진하는 **건조지 녹화파트너십**(GDP)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7→10개국)

○ 동북아 황사피해 저감 및 사막화방지를 위하여 **한-몽그린벨트 프로젝트** 및 **중국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지속 추진**

* 한국·중국·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DLDD(사막화, 토지황폐화 및 가뭄)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공적개발원조) 맞춤형 녹색 ODA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산림복원을 대표 협력브랜드**로 구체화하고, **한국형 산림복지숲을 녹색한류 新모델**로 개발

* 한국형 산림복지숲 : 생애주기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휴양 모델

○ 민-관, 관-관, KOICA 협력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발굴하고 내실있게 추진**

❑ (국제회의)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및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로 국제사회 그린리더로서의 국격을 제고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를 통해 **산불 방지 및 진화 기술을 공유**하고, 산불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제고**

* 제6차 세계산불총회 : '15.10.12~16, 평창 알펜시아, 80개국 3천여명 참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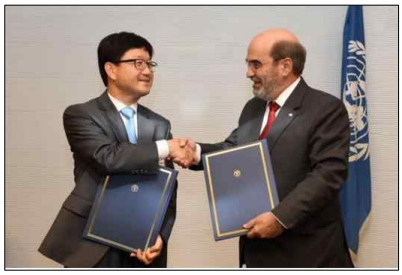
○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이자 산림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15th World Forestry Congress, 2021)**를 유치**

* FAO 공동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며, '15년 제14차 총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140개국, 1만명 참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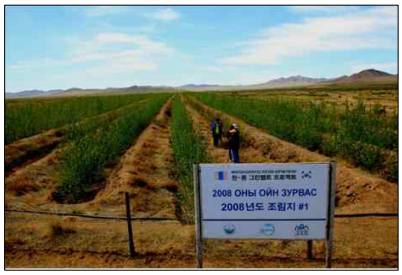
국제기구 등을 통한 산림협력



2014 한-아세안 특별산림 장관 회의('14.12월, 부산)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이행합의('14.6월, 로마)



몽골 그린벨트사업 조림지 (룬솜, 몽골)

4 기후변화 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

❑ (기후변화)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적극 활용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20년 **산림탄소 순흡수량 3천만톤 확보**를 위한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15~'19)을 이행

- 탄소흡수원 확대 등 6대 중점과제 및 22개 세부 과제 추진

○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로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

-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산림탄소관리사 자격 도입 추진

○ 산림분야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15.12)

- 제1차 적응대책 평가 및 환류, 신규 과제 발굴 등 추진

❑ (탄소배출권) 개발도상국의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을 통해 탄소배출권 선점 기반을 마련

○ 동남아 4대 중점협력국가와 REDD+[2] **공동시범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한국형 REDD+ 모델을 정립**

- 인도네시아 최초 REDD+/산림경영계획구 도입
- 캄보디아(6만ha), 미얀마(4만ha)의 현지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통해 동남아 REDD+ 사업기반 확산

* 동남아 4대 중점협력국가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개도국과의 **상호이익에 기반한 사업** 추진

- 기후변화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협력
- 개도국 공적개발원조와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연계한 사업 진행

2)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lus) :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

6.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관리

◇ 정책과제

① 산림자원 육성·관리체계 선진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한국형 산림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 종자채취에서 벌채까지 산림사업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 마련
- 임도·기계·기능인 등 산림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확충

②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 체계 구현

- Post 2020 체제에 대비한 제2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Smart Protection System'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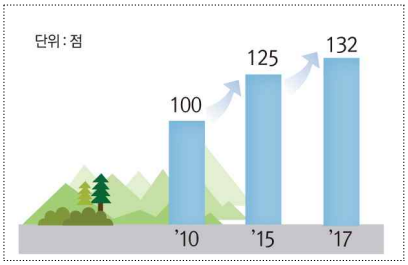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기후변화취약종 모니터링 및 백두대간·DMZ 훼손지 복원 실시
- 기후·식생대별 산림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수목원 조성 추진

④ 산업활동과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R&D 활성화

- 임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임산물 신품종과 관리기술 보급 확대
- 목재수확 효율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추진
- 산림치유의 건강증진 효과 규명 및 산림재해 정보화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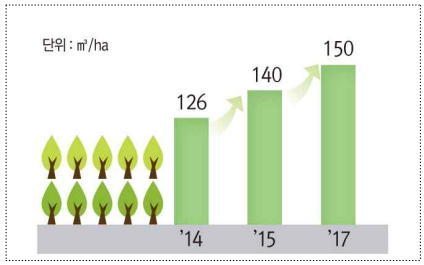
◇ 기대효과



산림지속성 지수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평균 임목축적

* 산림지속성 지수 : 산림면적 증감, 생물종 다양성 등을 토대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계량화한 지표

1 산림자원 육성·관리 체계 선진화

❑ (산림경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위해 **한국형 산림인증제를 도입**

- 한국산림인증위원회('15.1 출범)를 통한 인증표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산림기능구분도('14년 제작)를 활용한 **기능별 산림관리를 실시**

- 산림기능을 고려한 지역단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산림사업 설계

* 6대기능 : 목재생산, 수원함양, 생활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 산림휴양, 재해방지

-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조림을 위한 맞춤형 조림지도 고도화

○ **「경제림육성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도 산림경영단지**(8개소, 10년간) 운영으로 수익성 창출을 위한 **경영모델을 창출**

- 목재생산 잠재력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 재설계(450개 단지 292만ha)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의 내실화 추진

* 선도 산림경영단지 : ('14) 홍천, 진안, 보성 → ('15) 울주, 삼척, 홍성, 순천, 거창

❑ (산림사업) 종자채취부터 목재생산까지 통합적 사업관리 구현

○ 목재생산·조림 계획(3년)과 연계한 **종묘생산**을 추진(48백만본)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 정비 및 2세대 채종원 조성

- 자연재해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5개소)

○ 경제수종 조림을 확대하고(22천ha), **조림지 관리를 강화**

-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은 낙엽송·편백 등 경제수종으로 교체

- 풀베기 설계·감리 도입으로 조림목 활착율 제고 및 피해방지

○ 현장 여건에 맞게 **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222천ha), **사업품질을 제고**

- 사유림 설계·감리 확대(47→100%) 및 외부 모니터링 강화

❑ (국유림) 산림의 공익가치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국가관리 강화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백두대간, 곶자왈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사유림 매수
-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유림 내 보호구역 관리 강화

○ 국유림을 장기·안정적인 **우량목재 생산의 전진기지로 활용**

- 「경제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목재생산을 위한 집중관리 구역 설정
- 국유림 경영계획구의 DB화를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유림 관리체계를 구축**

- 지역별 국유림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 국유림 대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유도

❑ (산림 SOC) 임도 등 기반확충으로 생산비용 절감

○ 경제림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을 확충**

- 임도시설(809㎞), 구조개량(306㎞), 유지보수(4,324㎞)

  * 임도 밀도(m/ha) : 한국 3,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 지역 실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와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

- 대경목 생산용 기계장비 보급(60대) 및 전목집재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 산림작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입업기능인력 교육훈련을 강화**

- 임업기계 상설 교육장 조성(5개소) 및 현장 방문형 안전교육 과정 신설

임도시설 활용 사례



목재생산(기계화 산물수집)



산림재해 예방(산불진화)



생태관광·레포츠(산악자전거)

2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 체계 구현

❑ (산림관리) 'Post 2020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국가산림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

○ **제2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15~'19)*을 수립·이행

* 국·공·사유림을 아우르는 국가산림 정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산림토목, 국유재산 업무 등 **'국유림 정보화 체계'를 고도화**

- 시범검증을 거쳐 공·사유림으로 통합관리체계를 확대 추진

* ('15) 국유림 정보화 방안 마련 및 고도화 착수 → ('16) 공·사유림 확산을 위한 시범검증 실시(8개 시·군) → ('17) 국유림 완성 및 사유림 착수

❑ (재해관리) ICT를 활용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확산

○ 산불 예측·진화정보를 포함한 **산불관제시스템 통합운영 체계** 및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을 구축**

○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과 연계**(국민안전처 협업)하여 국가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고, **지자체 확산**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

* ('15) 국가 재난관리스템 연계 및 지자체 확산 → ('16) 오픈 API를 통한 민간 서비스 확대 → ('17) 위성정보 등을 활용한 예측 강화

❑ (스마트현장) 미래정보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산림관리체계를 확산

○ **'종이없는 현장업무'** 실현을 위해 스마트야장·모바일기기를 확대 보급(1인 1대)하여 스마트한 산림관리를 구현

- 사물인터넷(IoT), 음성인식 등 최신 ICT와 융·복합한 앱(App) 개발

○ 현장 어디서든지 즉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기반의 **원격업무처리시스템**(온나라, e-푸른샘, 현장모바일)을 구축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생태계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적응력을 강화하고, 백두대간·DMZ 산림생태계의 영속성 및 보전가치를 극대화

○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을 통해 **식재가능 Zone Map** 및 **개화예측지도를** 작성

* 희귀·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

○ **백두대간·DMZ일원 훼손지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

-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으로 등재 추진
- DMZ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고성, 양구)로 DMZ 산림관리의 전초기지화

❑ (수목원) 기후 및 식생대별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국가수목원 조성 추진

○ (온대북부) **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기반을 구축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09~'15, 2,200억원 / 경북 봉화

○ (온대중·남부)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및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

* 국립중앙수목원 : '12~'20, 1,374억원 / 세종특별자치시

○ (서부·해안) **새만금수목원**의 예비타당성 심사('15.2)에 대응

* 국립새만금수목원 : '16~'25, 5,874억원 / 전북 새만금

기후·식생대별 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공사현장)



중앙수목원 내 전통정원(조감도)



새만금수목원(조감도)

4 산업활동과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R&D 활성화

❑ (신소득창출) 임업인·산주·산업계 수요에 맞는 R&D 추진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신품종과 관리기술을 개발·보급**

- 밤나무 '대광', 표고 '백화향', 헛개나무 '풍성1호' 등 우수품종에 대한 경영임가 보급·확대('14년 48품종 → '15년 55품종)
-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학적 재배관리기술과 과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확 후 관리기술 중점 연구 실시

○ 임가유형·지역특성에 맞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14~'18)

- 수실류·약용류·버섯류 등 신(新)소득 품목 및 재배기술 개발
- 산림 내 서식하는 약용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연구 추진

❑ (기술사업화) 목질자원의 가치 증진 및 재활용 기술 육성

○ **국산 목재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현장 적용기술 확보 추진

- 대형 목구조 건축용 고강도 부재 및 구조시스템 개발('15~'18) 및 관공서와 평창동계올림픽 목조경기장 등에 활용
- 목질자원 열분해에 의한 바이오오일·반탄화 고체연료 성능 개선

* 바이오오일 3.6%(5,600→5,800㎉/㎏)·반탄화펠릿 6.0% 향상(5,000→ 5,300㎉/㎏)

○ **국산 소경목 제재 기술 및 MDF 재활용 기술 연구**를 추진

- 폐MDF 보드의 재활용을 위한 목질섬유 섬유분리기술 개발
- 국산 소경재 효율 증진을 위한 단목제재 시스템 마련

❑ (자원효율화) 산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현장기술 개발

○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축산조사료 제조기술**을 연구(농식품부 협업)

- 축산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질조사료 시제품 생산
- 목질조사료 제조기술 표준화 및 대량생산·유통시스템 마련

○ 산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원 육성·생산시스템을 구축**

- 탄소흡수원 등 산림기능의 최적발휘를 위한 산림 공익기능별 맞춤형 관리기술(Best Management Practice) 개발('15~'17)
- 목재수확 비용절감 및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시스템 개선 및 한국지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 벌채·집재 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 ('14) 2.5㎥/인·일 → ('15) 3.5㎥/인·일)

❑ (정책지원) 산림치유, 산림재해 등 정책현안 지원 강화

○ **산림치유의 건강증진 효과규명**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

- 민·관·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치유연구 네트워크 구축
- 임학·의학 등 다학제 참여를 통한 산림치유의 보험화 방안 연구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

- 산악기상관측망 확대(90→120개)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측력 향상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기술, 대국민 행동요령 등 경계피난 시스템 개발('15~'17)
- 천적 개발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친환경적 방제법 연구 및 피해목 자원화를 위한 이동식 열처리기 및 컨테이너 소독기술 개발·보급

7. 개방과 소통의 행정 구현

1 정부 3.0

❑ (서비스 정부)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임업인·산주 등이 받아야 할 주요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하여** 정보 부족에 따른 서비스 소외 사례를 방지

○ **소외계층** 대상 산림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산촌주민, 고령자** 등의 산림관련 **생활불편을 사전에 해소**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산림 패트롤」 운영

○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도입**하여 산림행정 서비스 혁신

❑ (유능한 정부) 지식기반의 과학적·선제적 행정 구현

○ **산림지식 범정부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행정**을 확대

○ 다른 부처와의 **협업지도**를 구축하고,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협업과제**를 발굴·추진

- 산림재해, 산림복지, 일자리, 창업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 우선 발굴

○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ICT 활용**으로 **재난대응력**을 강화

- 산불, 산사태 등 빅데이터 기반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투명한 정부) 수요자 중심의 원천정보·데이터 개방

○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천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 민간활용 효과가 높은 대용량 데이터를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개방('17까지 57종)하고,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적극 지원**

2 비정상의 정상화

❑ (불법행위) 불법산지훼손 및 면세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ICT를 활용하여** 불법 산지훼손(연 2,300여건)을 **효율적으로 감시·단속**

○ 보조사업 **DB화** 및 부처 간 **시스템 연계**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

❑ (임업인) 산림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과제 추가 발굴·이행

○ 산림산업계와의 협의·소통으로 **신규과제의 공동발굴을 추진**

- 임업단체장, 목재산업총연합회, 분야별 생산자협회 등 활용

○ **'산림청 정상화 추진 협의회'** 운영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독려

3 공공기관 개혁

❑ (공공기관 경영혁신) 사업방식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 **신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으로 **경영을 효율화**

- (녹색사업단)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사업 모델을 개발
- (임업진흥원) 현장지원 강화 및 위탁사업의 자체수행비율 제고

○ 기관별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에 따른 **책임 경영을 지원**

-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경영성과 제고

❑ (산림조합) 채용·인사제도 합리화 및 경영역량 강화

○ **외부위탁**을 통한 **공개채용** 활성화로 인사제도를 투명화

- 인사추천위원회 역할 강화 및 감사제도 개편 병행

○ **전문경영분야의 인력을 채용**하고, **성과관리제를 도입·시행**

Ⅴ. 주요 정책 현안

1.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

2. 봄철 산불방지 대책

1.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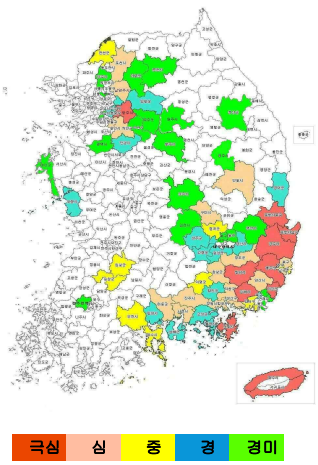
1 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 현황

❑ (피해현황)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05년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급격히 확산

○ 이상고온 등 기후적 영향으로 **매개충 활동 시기가 길어져** 재선충병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

○ 전국 74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14.12)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피해고사목 **약 109만본 발생이 예측**(전년 대비 50%)

* '14년 12월 기준, 피해고사목 89만본 발생



❑ (방제현황)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을 수립('14.11)하고, 예비비 배정, 특별 이동단속 등 방제에 총력 대응

○ **'14년 방제예산**(예비비 등 113억원 배정) 및 **방제인력**(2천명/일)을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방제작업**을 **추진**

* '14년 12월 기준 방제 진도율 : (발생) 89만본 → (방제) 37만본(41%)

○ 매개충 밀도 감소를 위해 **항공방제를 확대**(3→5회)하고, 인위적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

*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10.21~11.10)으로 총 44건 위반사례 적발 조치

○ **'15년 방제예산**(국비 480억원) 조기 배정 및 **방제인력 집중**으로 **매개충 우화기**(4월말) **이전까지 고사목을 전량 방제할 계획**

- 신속한 방제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14.12, 399억원)

2 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

◈ 시기별 **맞춤형 방제전략** 추진 및 **방제품질 확보**를 통해 **'15년 재선충병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감소
- 피해본수(만본) : ('13) 218 → ('14) 109 → **('15) 33** → ('17) 0

❑ (1~4월)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품질 향상

○ 지역별로 **매개충 우화기 이전**에 피해고사목을 **전량 방제**
- 안정적인 방제인력을 확보하여 1일 4~5천명의 인력 투입
- 피해 극심지역은 모두베기(수종갱신) 등 차별화된 방법 적용

* 매개충별 방제 완료 시기 : 북방수염하늘소 3월말, 솔수염하늘소 4월말

○ **책임방제·감리**를 도입하여 **현장관리 강화** 및 방제품질 제고
- 지역별 책임방제구역 설정 및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 부여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현장특임관 운영, 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기능 대폭 강화

❑ (5~8월) 매개충 살충을 위한 항공방제 및 친환경 방제 실행

○ **선단지~피해 중심부**까지 **항공방제**를 **확대**(2→5만ha)하고, **주택가·양봉농가** 등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은 **지상방제** 실행

○ **페로몬 물질**로 매개충 유인·포획 등 **친환경적 방제** 실용화

* 천적 개발, 불임 매개충 방사 등 새로운 방제기술 연구·적용 병행

❑ (9~12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및 예방 나무주사 실시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등으로 **인위적 확산을 저지**

○ **문화재 등 중요지역**에 대한 **예방 나무주사를 확대**(12~2월)

○ 하반기 재발생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및 **방제작업**을 추진

2. 봄철 산불방지 대책

1 금년도 봄철 산불 전망

❑ 따뜻한 날씨와 재선충병 방제로 산불 대응여건은 불리

○ 1월부터 따뜻한 날씨와 높은 기온이 예상되어(기상청 장기예보) **산불위험이 높고**, 재선충병 방제로 **현장 대응역량 분산 우려**

* 봄철 산불발생('14기준) : 연간 발생건수의 88%, 피해면적의 94%를 차지

2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사전대비 철저

○ **산불감시인력**(23천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316개)하여 위험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

○ 인화물질을 사전제거하고, **소각금지기간 운영**철저(3~4월)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사업 확대(200개 마을)

* '14년 산불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주요 원인(34%)으로 분석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산불방지시설 확대** 설치

○ **유관기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및 119로 신고 접수되는 **임야 화재 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산불신고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 감시카메라, 등산로 개방·폐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산림헬기**(45대), **인력 진화대**(기계화 193대, 광역특수 6대) 등 보유자원을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 진화**를 위해 최대한 활용

참 고 자 료

〈참고1〉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참고2〉 2015년 입법 추진계획

〈참고3〉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

<참고1>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연번	제목	대통령 말씀	업무 추진현황
1	산림가치 재창조	“산림을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두업무보고, ’13.3.22)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 수립·보고 (’13.6, BH 경제수석) ∙산림복지종합계획 수립 이행(’13.7~) ∙목재이용종합계획 수립 이행(’14.11~) ∙탄소흡수원종합계획 수립 이행(’14.12~)
2	야생화 자원화	“우리 고유의 야생화를 관광자원화하여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매개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진흥확대회의, ’13.10.27)	∙유용식물증식센터 건립(’14.3) ∙BH 사랑채 야생화 전시회(’14.5~) ∙야생화 세밀화 제작·보급(445점) ∙도시숲 등 녹지공간 야생화 식재 확대
3	산지규제 개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환경도 지키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산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4.3.12)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14.4)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14.4) ∙입법예고(’14.4~5) 및 심사(6~8) ∙개정안 최종 공포·시행(’14.9)
4	북한 산림복구	“북한 지역의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드레스덴 선언, ’14.3.28) “남북을 가로지르는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 ’14.8.15)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구성(’14.6)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와 연계 ∙동북아 산림분야 국제 워크숍 개최(’14.7) ∙남북산림협력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보고(’14.8, BH 외교안보수석) ∙남북한 종자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아시아녹화기구·평화의숲·수목원·품종센터) MOU 체결(’14.11) ∙’남북 농림축산협력 TF’참여(’14.11~)
5	국가정원 지정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방문시, ’13.10.20)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수목원법 개정(’14.12) ∙국가정원 지정 추진(’15) ∙정원지원센터 건립(’15~’17)
6	복합 관광단지 개발지원	“기업이 목장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초지법 개정으로 국유림 내 허용행위 확대(’14.11) ∙평창 올림픽특구(대관령) 내 국·사유림 교환 추진(’15)
7	산악관광 활성화	“산악관광은 성장가능성이 높음에도 산지규제로 제약이 많습니다. 산지를 대하는 의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국민이 산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전경련건의, ’14.6.9)	∙창조경제추진단 주관 산악비즈니스 활성화 TF 운영(’14.8~9) ∙문체부 주관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 TF 운영 중(’14.10~)

〈참고2〉 2015년도 입법 추진계획

□ 입법 추진계획 : 총 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기타 구분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 산지의 정의 ○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대상 정비 ○ 용도변경승인 예외규정 신설 ○ 벌칙(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령정비 (용어정의와 규정의 명확화 및 규제완화)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산림치유지도사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 ○ 자연휴양림 내 금지행위 규정 ○ 자연휴양림 내 개재된 토지(1ha 이내)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 ○ 자연휴양림 등 조성시 인·허가 의제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법령정비 (헌법합치성 제고) 기타 제도개선
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산림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불법선거에 따른 벌금(100만원 이상) 재판형량과정에서 선거·비선거 관련 사항을 분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 7월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30일까지 ○시행 : 공포 즉시	법령정비 (헌법합치성 제고)
4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임업인 및 귀촌희망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 인증절차 간소화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타 제도개선

<참고3>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2015 1분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 책임담당관 지정·운영	1~4월
	▪ 제2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개최	1월
	▪ 산촌 활성화 사업 공모	1월
	▪ 201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1월
	▪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5월
	▪ 봄철 나무심기 착수	2월
	▪ 2015년도 목재수급계획 수립	2월
	▪ 불법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2월
	▪ 제1차 한-에티오피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3월
	▪ 2015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3월
	▪ 소나무류 이동 전국 일제 특별단속 실시	3~4월
2015 2분기	▪ 제70회 식목일 기념행사	4월
	▪ 2014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공포	4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심의회 개최	4월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4월
	▪ 지리산 둘레길 걷기행사 개최	5월, 10월
	▪ 한-도미니카공화국 산림협력 MOU 체결	5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5월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실시	5~8월
	▪ 국가산림자원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6월
	▪ 산림고용박람회 개최	6월, 9월
	▪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개최	6월
	▪ 임업인과의 만남 행사 개최	6월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6~8월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2015 3분기	▪ 태풍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긴급대책 수립·시행	7월
	▪ 제25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8월
	▪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준공	8월
	▪ 제14차 세계산림총회 참석	9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실시	9월
	▪ 국립 DMZ 자생식물원 개원	9월
	▪ 2016년 도로변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9월
	▪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	9월
2015 4분기	▪ 제3회 I LOVE WOOD 캠페인 실시	10월
	▪ 제14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10월
	▪ 제2회 도시녹화운동 캠페인 실시	10월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10월
	▪ 제14회 산의 날 행사 및 산림박람회 개최	10월
	▪ 제1차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10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준공	10월
	▪ 2016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시행계획 수립	11월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1월
	▪ 종묘가격 결정·고시	12월
	▪ 제4차 임도설치계획(2016～2020) 수립	12월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 수립	12월
2016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5월
	▪ 산림탄소 전문가 제도 운영	12월
	▪ 나무심기, 숲가꾸기 추진	연중
	▪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방지 대책 추진	연중
	▪ 북한 산림복구 시범사업 추진(남북관계 등 상황을 감안)	연중
2017	▪ REDD+ 포럼, 국제심포지엄, 고위급 회의 등 추진	2월, 8월, 10월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밤재)	2～10월
	▪ 국제 산림탄소시장 연계 추진	12월
	▪ 나무심기, 숲가꾸기 추진	연중
	▪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방지 대책 추진	연중